동족과 힘으로 대결하려는 반민족적행위

얼마전 남조선국방부가 그 무슨 《군사적대응》을 떠들며 449억US$로 책정한 2020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것은 올해보다 7.4% 늘어난것으로서 력대 최대규모라고 한다.

동족과 힘으로 대결해보려는 반민족적행위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첨단무기도입과 성능개량에 쓰이는 2020년 《방위력개선비》를 2019년보다 8.6% 늘어난 149억 2 000여만US$로 정한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여기에는 3 000t급잠수함건조, 스렐스전투기 《F-35A》 도입, 정찰위성개발, 다음세대 이지스구축함건조가 속하며 특히 지상대지상전술유도무기개발에는 2019년보다 106배 증액된 5 000여만US$, 장거리공중대지상유도무기개발에는 2.8배 늘어난 1억 3 000여만US$를 배정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이 정정당당한 공화국의 자위적인 군사적조치를 구실로 첨단무기도입에 막대한 자금을 지출하려 한다는것을 말해준다.

남조선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반환》과 《국방개혁 2.0》추진으로 생길수 있는 전력공백을 메꾼다는 미명하에 230mm다련장로케트포 《천무》의 대량생산과 전술정보통신체계도입, 《한국형전투기》개발과 신형땅크 《K-2》의 추가생산, 첨단화된 개인전투체계개발 등에 막대한 자금을 할당하기로 한것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첨단무기도입과 성능개량, 무기개발 및 현대화가 확고한 군사적우세를 차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지난해 북과 남사이에 채택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북남사이에 무력에 의한 동족상쟁을 종식시킬것을 확약한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이라고 할수 있다.

북과 남이 평화번영의 길로 나가기로 확약한 이상 조선반도정세긴장의 근원으로 되고있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이 허용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반입도 완전히 중단되여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끊임없이 벌려놓으면서 한편으로는 남조선인민들의 더 많은 혈세를 첨단무기도입과 성능개량, 개발 및 현대화에 쏟아부으려 하는것은 그들이 앞에서는 《대화》와 《협력》에 대해 떠들고있지만 뒤에 돌아앉아서는 딴 꿍꿍이를 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책동은 조선반도의 평화적기류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망동으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는것이다.

제반 사실들은 온 겨레가 일치단결하여 이 땅에서 평화를 파괴하고 군사적긴장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들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본사기자 박철남

외세숭종에 환장한자들의 추태

남조선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결정이후 보수패당이 《한미동맹》균렬에 대해 전례없이 떠들어대고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은 련일 당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로 《한》미일안보협력체계를 와해시키고 《한미동맹》까지 끌장내려 한다, 《한미동맹》보다 《북중로체제에 편입》하겠다는 속심을 드러냈다, 경솔한 《정부》때문에 미국이 《적》으로 되고있다고 고아대고있다.

특히 남조선외교부가 미국대사를 불러 지나친 불만표출을 삼가해달라고 간청한데 대해 《한》미갈등이 위험수위를 넘었다, 《정부》가 반일운동을 국내정치에 리용하더니 이제는 반미운동까지 벌리려 한다고 피대를 돋구고있다. 한편 《바른시민사회》, 《나라사랑 전직외교관모임》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은 협정파기는 《한미동맹》력사상 최악의 불신을 표시한것이다,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미국주도의 각종 세계전략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 소멸될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시국선언》을 발표한다, 《정권퇴진운동》을 전개한다 하며 복닥소동을 피우고있다.

이에 덩달아 남조선보수언론, 전문가들도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로 동북아시아의 《안보지세》를 바꾸며 《한미동맹》의 와해까지 끌고가고있다, 미국이 앞으로 정책결정과정에 《한국》을 더이상 배려하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한미동맹》균렬에 대해 크게 여론화하고있다.

과연 온몸에 민족의 피라고는 한방울도 흐르지 않는 매국노무리의 황당한 궤변이며 단말마적발악이라 하겠다.

알려진것처럼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시민단체들과 인민들은 당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결정을 적극 지지하면서 여기에 불만을 드러내며 로골적인 압력을 가하고있는 미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얼마전 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는 매국협정의 파기와 관련하여 미국의 정객들이 련일 나서서 《실망》이니, 《우려》니 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있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계속하여 미국의 반응을 통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누구를 위한 협정이였는가를 잘 알수 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협정을 연장해야 한다고 떠들어대고있는것은 명백한 강박과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면서 남조선민심을 똑바로 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파기결정에 대해 더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이와 함께 국민주권련대와 청년당, 대학생진보련합도 서울에서 미국의 내정간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미국이 일본편을 들며 남조선을 압박하고 굴욕과 희생을 강요하고있다고 하면서 《욱일기》와 성조기를 찢어버리며 기세를 올렸다.

그런데 이러한 민심의 지향과는 배치되게 남조선의 보수패당이 《한미동맹》균렬에 대해 목이 터지게 고아대고있는것은 천년숙적과 맺은 매국협정의 파기결정을 기화로 미일상전에게 아부하여 재집권야욕을 실현해보려는데 그 비렬한 목적이 있다.

남조선 각계가 한결같이 인정하고있는것처럼 박근혜패당이 아베패당과 공모결탁하여 조작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군국주의부활에 환장한 섬나라족속들에게 조선반도재침의 날개를 달아준 매국협정, 전쟁협정으로서 애당초 체결되지 말았어야 하였다.

보수패당이 추구하는것은 이러한 친일매국협정을 존속시켜 침략적인 《3각군사동맹》을 구축하고 남조선을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실현을 위한 대륙침략의 전초기지, 위험천만한 전쟁터로 더욱더 내맡기려는데 있다.

남조선민심의 강력한 요구로 이루어진 친일매국협정파기를 가로막아보려고 미국까지 꺼들이며 필사적으로 발악하는 보수패당이야말로 외세에게 빌붙어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는 천하에 둘도 없는 매국노무리이다.

갈수록 오만하게 놀아대는 섬나라쪽 발이들과 그에 맞장구를 치는 미국에 무조건 굴종해야 한다며 친미, 친일을 부르짖는 보수패당의 사대매국적광태는 온 겨레와 세인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이런 반역의 무리들이 또다시 권력을 차지한다면 남조선은 외세의 가중되는 예속과 억압, 침략과 략탈로 인한 굴욕과 치욕을 더욱더 들쓰게 될것이다.

더러운 사대매국의 피가 흐르는 극악무도한 보수역적패당이 력사의 오물통에 처박히는것은 이제 시간문제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반일, 반《자한당》투쟁을 벌리고있는 남조선인민들

해외동포사회에서
반일투쟁 고조

최근 해외동포사회에서 반일투쟁이 그 어느때보다 고조되고있다.

해외의 각지에서 동포단체들과 각계층 동포들은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책동을 강력히 규탄배격하는 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재미동포전국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련합회를 비롯한 해외의 여러 동포조직들에서는 홈페지들에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조치를 반대하는 해내외의 투쟁소식들과 함께 《일본의 극악한 조선민족말살정책의 산물》, 《허리띠를 졸라맬지언정 다시는 식민지의 삶을 살수 없다》 등의 제목으로 과거 일제의 조선침략죄행과 아베일당의 재침야망책동을 폭로하는 기사들을 련일 게재하고있다.

세계 각국 해외동포언론사들의 련합단체인 해외동포언론사협회는 각국의 해외동포언론사들에 일본상품불매와 일본려행을 중단하는 《NO 일본》운동에 해외동포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송하였다.

미국과 카나다,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웰남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해외동포들이 일본의 경제보복규탄대회, 일본상품불매결의대회,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련대집회 등을 열고 일본의 뻔뻔스럽고 야만적인 처사를 반대하여 끝까지 싸울 결의들을 다지고있으며 인터네트망들에 일본상품불매운동전문싸이트와 반일투쟁전문싸이트들을 개설하고 세계적범위에서의 일본반대투쟁확대를 추동하는 동영상편집물들을 만들어 게재하고있다.

특히 워싱톤과 뉴욕, 시카고, 로스안젤스를 비롯하여 미국의 많은 재미동포들속에서는 지난 8월초부터 일본대사관에 항의서한 보내기, 미련방의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반대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운동, 현지사회에 일본군성노예문제를 알리기 위한 자전거횡단 등 일본을 반대하는 다양한 운동들을 벌리고있다.

한편 남조선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결정을 지지하고 이를 비난하는 남조선의 친일보수패당의 행위도 단죄해나서고있다.

재미동포전국련합회와 재도이칠란드동포협력회를 비롯한 해외동포조직들에서는 남조선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네트홈페지들에 《시원한 결정》, 《결정 환영》 등의 글들을 게재하였다.

뿐만아니라 재카나다동포단체인 《카나다범민주원탁회의》와 재영국동포신문 《유로져널》을 비롯한 동포단체들과 동포언론들은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라경원과 같은 남조선보수세력들은 당리당략에만 치우쳐 일본을 비호두둔하는 친일매국행위만을 일삼고있다고 하면서 해내외동포들이 초불규탄시위를 열어 다음해 《총선》에서 보수패당을 반드시 심판하자고 호소하고있다.

본사기자

반일투쟁을 벌리는 해외동포들

천년숙적과 입맞추는 반역행위

남조선에서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조치를 규탄배격하는 반일투쟁의 기운이 날로 높아가고있다.

이러한 속에서 얼마전 남조선당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를 결정하였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는 일본의 횡포무도한 경제침략행위를 반대하여 정의로운 반일항전에 떨쳐나선 남조선민심의 강력한 요구가 안아온 결과이다.

따지고보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남조선과 일본을 《군사동맹》관계로 묶어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기도와 재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일본의 야심, 초불민심에 의해 종말을 앞둔 박근혜《정부》가 외세에 빌붙어 잔명을 유지해보려는 어리석은 타산에 의해 2016년 11월 조작된것이다.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전쟁의 구름을 몰아오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애초에 체결되지 말았어야 했다.

이런것으로 하여 이번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결정은 너무도 당연한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군부당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이후에도 일본과의 군사적결탁에 계속 매여달리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군부당국이 공화국의 자위적인 국방력강화조치이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구실밑에 일본에게 수집한 정보를 넘겨주는것과 같은 범죄적행위를 감행한것이 바로 그것이다.

남조선군부당국의 태도는 동족대결을 위해서라면 민족적존엄도, 민심의 분노도 아랑곳하지 않고 천년숙적과 서슴없이 입맞추는 반역적망동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력사의곡과 야스구니진쟈참배소동, 《평화헌법》을 《전쟁헌법》으로 뜯어고치기 위한 헌법개악책동, 천문학적액수의 돈을 탕진하면서 진행하는 미국으로부터의 스렐스전투기도입사업과 세계 그 어느 지역에서도 군사력을 행사할수 있는 준항공모함개조소동, 《자위대》의 해외파병 등 일본의 군국주의부활과 군사대국화책동은 이미 위험계선을 넘어섰다.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는것이 일본의 대륙침략야망이다.

그 첫번째 대상이 바로 조선반도이다. 최근에 와서 더욱더 로골화되고있는 일본의 독도강탈야망도 그것을 보여주는것이다.

조선반도에 대한 침략의 기회만 노리며 군침을 흘리고있는 일본에게 군사정보를 넘겨주는것은 섬나라족속들에게 침략의 길안내를 하는것이나 같다. 온 남조선땅이 과거에 저지른 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오히려 경제침략만 일삼는 일본에 대한 분노와 규탄으로 부글부글 끓고있는 때에 남조선군부당국이 여기에 합세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군사적결탁에 계속 매여달리고있으니 쓸개빠진짓이 아닐수 없다.

민족의 근본리익을 놓고 우유부단하거나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겉과 속이 다르게 놀아대다가는 차례질것이란 민심의 버림뿐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용납할수 없는《토착왜구》들의 망동

지난 7월에 남조선에서는 《반일종족주의》라는 피상한 제목을 단 도서가 출판되였다.

《리승만학당》 교장 리영훈을 비롯한 5명의 친일학자들이 공동집필한 이 도서는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들씌운 강제징용, 일본군성노예문제 등과 같은 천인공노할 죄악을 전면부정하고 일제의 《식민지근대화론》을 정당화한 쓰레기도서인것으로 하여 남조선사회에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그 제목부터가 보는 사람의 신경을 자극하는 이 책은 일제의 식민지지배와 략탈을 정당화하고 일본반동들의 군국화책동과 재침야망을 비호두둔하는 천하에 둘도 없는 매국도서로서 지금 전체 조선민족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이번 매국도서출판에 가담한자들이야말로 섬나라오랑캐들의 피가 뼈속까지 들어찬 매국노들로서 온 민족의 이름으로 하루빨리 릉지처참해버려야 할 추악한 친일역적들이다.

하지만 도서집필에 가담한 친일분자들은 남조선과 일본의 보수언론들에 출연하여 강제련행이나 노예로동주장에는 의문만 가득하다, 력사를 외곡하며 거짓말만 되풀이해서는 사회가 발전할수 없다고 떠벌이면서 《수십년에 걸친 필자들의 연구인생결과를 담은것이다.》고 저들의 매국도서를 미화분식하는 추태를 부리고있다.

일본의 극우보수세력들도 도서가 《일본의 식민지지배와 과거사청산 등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진실을 보여주었다.》, 《일본과의 과거사문제가 조작된 결과 남조선의 반일감정이 자라났다.》고 하면서 더러운 친일분자들의 매국행위를 적극 지지하는 놀음을 벌리고있으며 지어 일본의 한 우익출판사는 이 책을 번역출판하겠다고 하고있다.

과거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창씨개명》하고 친일매문으로 더러운 목숨을 부지한 추악한 민족반역자의 후예들이 아직까지도 활개치고있는것은 남조선사회의 비극이며 민족의 수치이다.

바로 이런 역적무리들이 길잡이역할을 놀고있기에 일본반동들이 더욱 기고만장하여 남조선에 대한 경제침략을 단행하고 저들의 과거 식민지지배를 정당화하는 망발을 함부로 내뱉고있는것이다.

남조선 각계층이 이번 매국도서를 출판한자들을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행세를 하는 토착왜구》라고 단죄규탄하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문제는 이러한 친일매국의 독버섯들이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섬나라족속들과 같은 외세에게 팔아먹으며 재집권야망을 추구하는 보수세력이라는 썩은 서식지에서 자라고있는데 있다.

지금 남조선의 절대다수 사람들은 날로 로골화되는 일본의 경제침략책동에 맞서 다양한 형태의 반일투쟁을 벌리고있으며 심지어 경제적형편이 어려운 소상인들까지 자기들의 매장에서 일본제품을 판매하지 않고있다.

그런데 명색이 조선사람이라고 하는 남조선의 보수패당들은 이러한 투쟁을 두고 《일부 대중의 저급한 반일종족주의》라고 헐뜯는가 하면 심지어 《자유한국당》소속의 《국회》의원이라는자는 《리영훈교수님의 〈반일종족주의〉 책을 읽고 그걸로 무장한 전사가 돼서 열심히 해보겠다.》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다.

친일매국노들이 활보하고있는 남조선의 현실은 친일매국과 보수는 쌍둥이이며 일본의 만고죄악에 대한 철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보수패당을 완전히 매장해버려야 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발악적으로 감행되는 《토착왜구》들의 망동을 이제 더는 용납해서는 안된다.

남조선인민들이 너절한 매국도서를 출판한 친일역적들과 이러한 친일매국행위를 적극 조장하고 비호두둔하는 보수패당을 청산하기 위해 벌리고있는 투쟁은 지금 온 민족의 지지찬동을 받고있다.

박현수

응당한 판결, 도전하는 적폐무리들

예로부터 죄와 벌은 한가지에서 자란다고 했다. 죄를 지었으면 그만큼 벌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얼마전 남조선의 《대법원》은 박근혜역도에 대한 3심선고공판에서 년에게 징역 25년, 벌금 1 800만US$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2심)의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남조선의 언론들이 밝힌데 의하면 《대법원》이 《파기환송》판결을 내린것은 1심과 2심에서 박근혜의 핵심범죄인 뢰물수수혐의를 강요 및 직권람용과 같은 다른 범죄혐의들과 분리하지 않고 함께 취급한것이 사법절차에 어긋났기때문이라고 하고있다. 남조선의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의 뢰물죄는 다른 범죄혐의와 분리하여 심리를 해야 한다고 되여있다. 그런가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는 공무원이 10만US$이상의 뢰물을 받는 경우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되여있다. 이런것으로 하여 집권기간에 대기업들로부터 5 000여만US$를 뜯어낸 박근혜는 사실상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2심)은 피고인의 범죄혐의가 18가지로서 너무 많다, 이 경우 비슷한 범죄혐의들은 같이 취급하는 법원관례를 따른다고 하면서 뢰물수수혐의와 강요 및 직권람용혐의를 함께 묶어 박근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였었다.

남조선의 언론들은 이번에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박근혜의 죄목에 있는 뢰물수수범죄를 《국정》롱단범죄와 얼렁뚱땅 합쳐서 형량을 적당히 계산한것을 발견하고 개개로 형량을 확정하도록 결정한것으로서 앞으로 뢰물수수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박근혜는 기존보다 높은 형벌을 피할수 없게 되였다고 평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민주개혁세력들은 지지하고있는 반면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민주주의파괴이다.》,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있다.》, 《박근혜를 서울고등법원에 묶어두고 죽이려고 한다.》고 줴쳐대며 강하게 반발하고있다. 특히 친박근혜패거리들인 《우리공화당》은 《파기환송》판결이 결정되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대법원》앞에 몰려와 《대법원은 문재인좌파독재정권의 주구》, 《박근혜를 당장 석방하라.》고 고아대며 란동을 부려댔다.

리성을 잃고 객기를 부리는 보수세력들의 추태는 그야말로 저승길에 오른자들의 단말마적발악에 불과하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극악한 사대매국행위와 동족대결책동, 전대미문의 반인민적악정과 부정부패행위를 일삼은 천하악녀 박근혜를 징벌하려는 민심의 반영이다.

이번의 재판에서 보는것처럼 박근혜가 저지른 죄악은 무려 18가지로서 어느 하나 가볍게 처리할 문제들이 아니다. 남조선의 각계층이 그 하나하나의 죄악들에 최소한 2-3년의 형벌이 주어져도 박근혜에게 30~50여년형이 차례진다고 하면서 종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런것으로 하여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천추에 용납 못할 특대형범죄행위를 저지른 특등범죄자 박근혜역도에게 하루빨리 극형을 선고할것을 요구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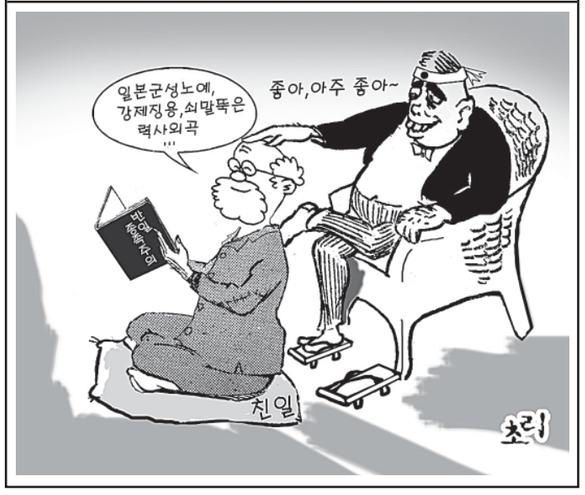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민심의 요구에 반기를 들고 란동을 부리는것은 그들이야말로 역도년과 같이 매장해버려야 할 추악한 범죄의 무리들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보수세력들이 박근혜의 무죄와 탄핵을 반대하여 필사적으로 발악하는 여기에는 불순한 기도가 숨겨져있다.

민생에는 관심이 없이 《장외투쟁》과 《안보장사》, 친일매국행위로 남조선을 더욱더 파국에로 몰아가는 《자한당》을 민심은 매국역적당으로 규정하고 해체할데 대한 목소리를 더욱더 높이고있다. 여기에 더 많은 리익을 차지해보려는 계파간의 치렬한 개싸움질로 《자한당》은 민심의 조소거리로 되고있다. 날로 험악해지는 심각한 정치적위기에 빠진 보수세력들이 박근혜의 망령을 되살려 보수재결집과 재집권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온갖 악을 다 쓰면서 민심에 정면도전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 보수역적무리들의 란동을 짓뭉개버리지 않는다면 민심이 바라는 정의로운 사회는 고사하고 초불항쟁으로 쟁취한 소중한 전취물도 지켜낼수 없게 될것은 뻔하다.

박근혜와 함께 력사의 오물통에 처박혀야 할 《자한당》과 같은 적폐무리들이 발악을 해댈수록 그것은 제 목에 걸린 올가미의 끈을 더욱 조이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

리미영

만평 《토착왜구》